

북한의 소련 경제원조 수취 경험

1964년 평양선언 갈등의 기원과 전개*

장초(張超)**

이 논문은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소련 경제원조 수취 경험과 그에 따른 갈등에 대해 분석한다. 북한은 제1차 5개년계획(1957~1961) 추진 과정에서 소련의 원조에 덜 의존하면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초기에는 소련의 원조에 의존했지만, 점차 내부 축적과 대중운동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 북한은 소련 주도의 '통합경제' 노선이 경제적 자립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해 소련과 갈등을 빚었지만, 그럼에도 자립 경제 건설노선을 고수했다. 1964년 "평양선언"을 통해 소련의 원조를 비판하며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주창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이 소련의 원조 경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통해 독자적인 사회주의국가로 발전해 갔다고 분석한다. 북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원조의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며, 향후 관련 연구에서 수용국의 경험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주제어: 경제원조 경험, "평양선언", 사회주의공업화, 자립경제, 자력갱생

* 이 논문은 2024년 흑룡강성 고등교육 기본 학술연구 지원을 받아 수행한 "북한의 공업화와 과학기술인력 양성 연구(1945~1970년)"이라는 프로젝트의 부분 성과임.

** 중국 흑룡강대학 역사문화관광학원 전임강사.

1. 머리말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인민경제계획화¹⁾ 추진 과정에서 소련 경제 원조의 역할과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북한이 경제 복구·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소련의 경제원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충당한 과정을 밝혀 보고자 한다. 북한의 제1차 5개년계획(1957~1961년) 추진 시기를 대상으로, 수요 자금 해결의 전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학계에서는 1950년대에 소련이 북한에 대해 상당한 규모로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소련의 원조가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미국과의 대립에서 소련의 영향력 확대 등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또한 소련의 경제원조가 북한의 경제 발전과 국가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계획경제모델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문제와 북한 경제의 의존도 증가, 경제의 효율성 저해 등을 결과했다고도 평가한다.

이시연은 소련의 북한 원조에 대한 연구에서 전홍찬, 백준기, 살론타이, 바자노바, 셴즈화, 임방순, 이영훈, 김보미, 펜들러, 박종철 등의 선행 연구들에 대하여 “대부분 원조 공여국의 관점에서 분석”했고, “원조에 대한 단순한 사실의 나열에 불과”했다고 정리했다.²⁾ 이 논문

-
- 1) ‘인민경제계획화’는 나라의 인민경제 발전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을 조직, 지도하는 사회주의국가의 주요한 통일적 지휘 기능과 활동을 말하며, 계획 작성과 시달, 계획 실행 조직과 지도, 총화 등을 포괄한다. “어떻게 쏘베트인민은 소련에 사회주의를 건설했나,” 『로동신문』, 1947년 8월 21일.
 - 2) 소련의 북한 원조에 대한 대표적 연구 성과는 이시연, “북한 원조의 정치경제학: 1950년대 소련·중국·동유럽 사례”(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이다. 이시연은 전홍찬, 백준기, 살론타이, 바자노바, 셴즈화, 임방순, 이영훈, 김보미, 펜

에서는 이시연의 논문 이후에 나온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지영은 대외원조에 대한 북한의 시각을 『로동신문』 기사에 대한 전수조사로써 이해하고자 했다. 그는 1949~1959년의 원조 관련 기사를 283개 선별하여 분석했는데, 결론은 북한이 원조에 대해 이분법적 시각을 가졌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소련 원조를 “상당한 규모의 대외 원조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전후 복구에 활용한 경험이 있던 수원국”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국제행위”로 봤지만, 미국 원조에 대해서는 “제국주의적, 침략적, 약탈적”으로 봤다는 것이다.³⁾ 『로동신문』 기사를 분석했지만, 이전과 다른 주장은 없다. 『로동신문』 전수조사를 통한 논증도 과장된 것이다. 1949~1959년 『로동신문』의 원조 관련 기사는 1만 건 이상이며, 기사 제목만도 1,192건이다. 무작위로 283건만 뽑아서는 곤란하다.

윤철기는 북한 지배체제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1950~1960년대 북한의 계획경제 메커니즘의 원형 형성 과정을 분석했다. 그는 경제원조가 북한 전후 복구의 핵심 동력이었다고 본다. 대북원조가 북한의 전후 복구와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 원인으로 공장과 설비의 직접적 투자 확대, 기술 이전 및 노동력 지원, 소련과 북한의 불협화음이 빚어 낸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 산업 불균형의 완화를 들었다. 경제원조를 둘러싼 북한과 소련의 대립 실재를 서술하며 그 이유를 주로 소련

들러, 박종철 등 선행 연구를 꼼꼼히 검토했다. 이시연은 새 자료들을 활용한 바탕 위에 선행 연구들에 대하여 “대부분 원조 공여국의 관점에서 분석”했고, “원조에 대한 단순한 사실의 나열에 불과”했다고 정리했다.

3) 김지영, “대외원조에 대한 북한의 인식 연구: 로동신문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1권 3호(국제개발협력학회, 2019), 24~35쪽.

내부의 탈스탈린화로 논증했다. 1956년 경제원조의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 극복을 설명하며 긴축과 내핍으로 인한 대중의 희생과 “더 심각한 경제위기의 전주곡”만 말했다.⁴⁾

조수룡은 북한이 제1차 5계년계획 수립과 실행에서 우방국 원조의 감소로 중대한 재정위기를 겪었지만, 실증적 연구가 없었다고 선행 연구를 정리했다. 그는 소련 자료와 북한의 학술잡지를 활용하여 원 조 유치 실패와 재정위기, 5개년계획 재작성, 대중 동원을 통한 계획 강행, 계획의 조기 완수와 후유증을 설득력 있게 재구성했다. 다만 외부 원조 확보를 위한 시도를 통해 “경제 위기의 만성화”와 “자력갱생의 성공이란 환상”을 주장했을 뿐 소련 원조에 대한 평가는 없다.⁵⁾

이주호는 1950년대 소련이 제공한 무상 경제원조와 관련해 1956년 8월에 맺은 경제원조협정을 분석했다. 그는 무상원조의 내용에 대한 연구 공백을 지적한 후 소련 원조의 양상과 성격, 원조 협상을 통해 본 북·소 관계 변화를 조명했다. 이를 통해 무상원조의 제공은 북한이 소련의 정책 권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곧 1956년부터 북·소 관계의 균열까지로 볼 수 없다고 실증했다.⁶⁾ 다만 원조 경험과 관련하여 북·소 관계의 갈등·파국까지 연구를 넓히지 못한 점은 남겨진 과제이다.

가장 최근의 연구에서 이주호는 1950년대 북한 공업화 전략에 대한

4) 윤철기, 『북한 계획경제의 정치학』(서울: 선인, 2021), 295~299, 319~322쪽.

5) 조수룡, “약순환의 기원: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재정위기와 제1차 5개년계획 (1957~61),” 『민족운동사연구』, 제112호(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2).

6) 이주호, “1950년대 소련 대북 무상원조의 지속과 변화: 1956년 8월 경제원조협정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67집(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2).

갈등이 북한 지도부 내에서, 그리고 경제원조 공여국인 소련과 북한 사이에서 이중적으로 전개되었다고 파악했다. 북한은 철강공업 복구에 소련의 원조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지만, 소련은 북한의 급진적 공업화정책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계획을 거부했다고 정리했다. 이를 통해 소련의 원조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북·소 관계를 다각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철강공업 복구를 위한 무상원조가 1958년부터 유상 경제협력으로 바뀐 사실을 밝혔다.⁷⁾ 그는 경제원조를 둘러싸고 생겨난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이해 상충을 드러냄으로써 관련 연구의 지평을 제대로 넓혔다.

북한 학계에서는 인민경제계획화 입안과 진행을 정리한 논설들을 여러 편 발표했다.⁸⁾ 가장 큰 특징이자 한계는 이미 조선로동당이 5개년계획의 결과를 ‘자랑스러운 승리’로 평가했으므로,⁹⁾ 당 경제정책이 옳았으며 계획경제의 우월성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증명했다고 서술할 뿐이다. 이 시기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 받은 경제원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무역 분야에서 “경제적 협조와 연계가 확대 강화”를 말할 뿐이다.

북한에서 ‘경제원조’란 “혁명이 먼저 승리하였거나 경제적으로 앞선

7) 이주호, “1950년대 북한의 철강공업 복구와 소련의 지원: 식민지 생산구조의 극복 과정을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 제65호(효원사학회, 2024).

8)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사회주의건설사 3』 제30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김한길, 『현대조선력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전영률 외, 『조선통사』 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리영환 외, 『조선통사 개정판』 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6).

9) “자랑스러운 승리의 총화,” 『로동신문』, 1957년 2월 24일.

나라와 뒤떨어진 나라, 경제적 난관을 겪는 나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지원형태"이며, "경제원조를 주는 것은 응당한 의무"이다. 형태는 "무상원조,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에 의한 차관의 제공과 과학기술적 협조" 등이다. 반면에 '제국주의적 원조'는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의 중요한 수단, 자본 침투의 길잡이"라고 구분한다.¹⁰⁾

북한이 '경제원조'를 받은 것은 당시 『로동신문』 등에서 계속 보도했듯이 분명한 사실이다.¹¹⁾ 그런데 북한 학계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의견이 매우 달라 불만이 컸기 때문에 '경제적 협조'라고 서술했을 것이다. 1950년대 소련의 경제적 지원을 '진정한', '제대로 된' 경제원조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북한은 소련의 경제원조 과정에서 어떤 경험적 지식을 쌓았을까?

인간의 판단과 결정에서 경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험을 통해 인간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다. 경험은 판단력 강화에도 역할을 한다. 비슷한 상황에 반복적으로 직면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초를 쌓을 수도 있다. 경험은 무엇보다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하며, 창의적 해결책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조선로동당은 196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 말리, 알제리, 콩고 등에 경제기술적 원조를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경제원조'에 대한 경험적 지식까지 함께 제공하고자 했다. 북한의 경험은 중공업을 우선으로 하고

10) 백과사전출판사 엮음, 『조선대백과사전』, 올림말.

11) 소련으로부터 경제원조 기사는 "무엇으로 갚으랴? 이 은혜, 소련서 물자 재반입"('정로', 1946년 6월 14일) 이후 계속 나온다. 당시 받은 물자는 식량과 석유였다.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 발전노선 추진과 관련한 것이다. 김일성 수상은 1953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6차 회의 보고를 통해 “공업의 다면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고립·폐쇄가 아닌 사회주의블록과의 국제분업 및 교역발전을 제기했다.¹²⁾ 이 노선은 과거 식민지 경제의 낙후성과 심한 전쟁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최단기간에 자립적 경제토대를 건설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기인한 것이다.

전쟁의 잣더미 위에 자금과 자재, 기술이 극히 부족한 조건에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추진은 유례없는 정책이었다. 북한이 모델로 삼았던 소련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전 사회주의 공업화과정에서도 이 같은 정책은 실시되지 않았다. 전후 인민민주주의국가들에서도 사회주의 공업화의 첫 시기였던 5개년계획 기간에 이런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경공업을 먼저 성장시켜 일정 자금을 축적한 후에 중공업을 건설했다.

북한은 독창적인 사회주의 공업화정책을 추진하며, 특히 ‘자주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¹³⁾ 북한은 1950년대 중후반에 걸쳐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극히 짧은 시간에 자주적 민족경제를 건설한 ‘역사적 경험’을 창조했고,¹⁴⁾ 그것을 다른 국가들과 나누

12)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을 방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의 사업 경과보고,” 『로동신문』, 1953년 12월 22일.

13) 김상학, “제1차 5개년계획 기간에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경공업 및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정책,” 『근로자』, 제3호(1958), 51~52쪽.

14) 전용식,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노선과 그의 위대한 생활력,” 『우리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의 승리: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 기념 논문집』(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1), 146~148쪽.

고자 했다.

1964년 6월에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아시아 경제토론회는 북한의 자력갱생을 통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정책의 정당성을 “평양선언”으로 선포했고, 소련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원조 받으며 쌓은 경험에 기초하여 다른 국가 대표단들과 의견을 교환한 후 발표한 “평양선언”은 소련 원조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2차 아시아 경제토론회에서 채택한 “평양선언”을 둘러싼 소련과의 논쟁을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195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겪었던 경제계획화사업에 필요했던 자금 충원의 어려움과 새로운 해결 방법 모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로동당이 소련의 경제원조에 대한 이해와 대안적 해결책 마련 등을 정리함으로써 ‘경제원조’에 대한 제공자의 일방적 이해를 수용자 관점에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2. “평양선언”을 통한 소련 원조를 받은 경험 공유와 충돌

1964년 6월 16~23일, 평양에서는 제2차 아세아경제토론회가 열렸다. 이 회합은 “아세아, 아프리카나라들이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나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확립을 위한 투쟁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와 축적한 경험에 기초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단결과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하루 속히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세일론 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위원장 구나와르다나의 발기에 의하여 1962년 10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회의 참가

국들은 '반동정신'에 기초하여 경제협조 강화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왔다.¹⁵⁾

회합이 열리던 시기는 “반제민족해방혁명의 거세찬 폭풍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광대한 지역을 휩쓸고” 있었다. 이곳의 사회주의국가들과 신생 독립국가들이 식민주의제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조건에서 미국 등은 ‘원조’를 통하여 이 지역 나라들의 경제 명맥을 장악하고, 나아가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였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자력갱생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할 과업”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여기서 북한을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모델로 생각했기 때문에 평양에서 회합을 개최했던 것이다.¹⁶⁾ 1961년 9월에 개최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 토론에서 김창만은 “자본주의국가들이 70년-80년 걸려 건설한 공업 발전 수준에 대등한 공업 건설을 불과 6~7년 동안에 해 놓았”다며 “일부 주요한 공업제품의 인구 1인당 생산에서 일본을 이미 거의 따라잡았거나 혹은 앞서고 있다”라고 주장했다.¹⁷⁾ 1960년대 중반에 이르면 재일동포들에 대한 8억 864만 엔의 교육원조비 지원과 월남 인민을 지원하였다.¹⁸⁾ 북한은 자체적인 자금

15) “아세아 경제토론회를 열렬히 축하한다,” 『로동신문』, 1964년 6월 16일.

16) “자력갱생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할데 대하여,” 『로동신문』, 1964년 6월 24일.

17) 김창만은 북한과 일본의 중요 공업제품의 인구 1인당 생산량을 비교하여 발전량은 조선 970KWH, 일본 953KWH, 철광석 379:14, 시멘트 240:241, 어획고 74:54 등의 수치를 제시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와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대한 토론 김창만동지의 토론,” 『로동신문』, 1961년 9월 14일.

18) “1966년 국가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과 1967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7차 회의에서 한 재정상 한상두 대의원의 보고,” 『로동신문』, 1967년 4월 25일.

축적 부족과 재정 균형 유지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원조를 받던 나라로부터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토론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알제리, 앙골라, 호주, 카메룬, 세이론, 콩고, 가나, 인도네시아, 일본, 케냐, 말리, 모잠비크, 네팔, 뉴질랜드, 니제르, 르완다, 수단, 태국, 우간다, 월남민주공화국 등 34개 국가 대표단과 대표들이 참가했다.¹⁹⁾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신생 독립국가들에서의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로써 나라를 부강하게 발전시킬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²⁰⁾ 회의의 토론 내용을 반영한 “평양선언”은 “정치적 독립의 달성은 민족해방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은 민족해방혁명의 완수를 위한 하나의 연속적인 혁명과업이다. 자립경제 건설은 이 나라들이 이미 쟁취한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는 확고한 담보”라고 선언했다. 더불어 부강한 자주 독립국가로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인민의 무진장한 창조적 힘을 믿어야 하며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 이용하여야 한다”

19) “아세아경제토론회 개막회의 진행,” 『로동신문』, 1964년 6월 17일; “아세아경제 토론회 폐막회의 진행,” 『로동신문』, 1964년 6월 24일.

20) 북한 잡지 『근로자』에서는 경제토론회 개최 이전부터 조선로동당이 자력갱생의 원칙, 자립경제 건설의 노선을 견지함으로써 위대한 승리들을 쟁취했다고 선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주의국가들의 호상관계는 완전한 평등, 국가적 자주성과 주권의 존중, 호상간의 내정 불간섭의 원칙과 형제적 호상원조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면서 “만일 어떤 ‘생산전통’이나 ‘자연 경제적 유리상’ 혹은 ‘수익상’을 논하며 제한된 일부 생산부문만을 발전시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나라의 민족경제를 기형적인 것으로 만들며 다른 나라 경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움직여 나갈 수 없는 것으로 되게 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권두언: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 『근로자』, 제12호(1963), 2-6쪽.

라고 주장했다.

“평양선언”에는 소련의 대외 경제관계를 겨냥한 내용도 포함했다.²¹⁾

자립적 민족경제는 ‘폐쇄적인 경제’나 ‘고립된 경제’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은 국가들 간의 경제적 협조를 배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라들 사이의 호상 지지와 협조를 더욱 촉진시킨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해 나갈 때에만 다른 나라와의 국제적 협조관계도 건전한 토대 위에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외부의 진정한 원조가 있을 경우에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진정한 협조’와 ‘사심 없는 원조’를 말로는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자기의 그릇된 정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자기의 험악한 경제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미끼로 삼는 것은 경제협조의 원칙에 배치된다. 경제적 협조와 호상 원조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 자주성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하며 경제기술적으로 효과적이어야 한다. ……

“평양선언”은 소련이 북한에 했던 원조에 대해 그릇된 정책의 강요 수단 또는 자국의 경제적 이득 추구 미끼로 비판했던 것이다.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받으며 “완전한 평등과 호혜, 자주성”을 침해받았고 내정까지 간섭당했으며, 경제기술적으로도 효과적이지 못했던 경험을 회의 참가국 대표단과 공유했던 것이다. 나아가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 기준과 목표 지향을 선포했던 것이다.

21) “아세아경제토론회 평양선언,” 『로동신문』, 1964년 6월 24일.

공공연한 만큼 위험했다. 회의가 끝나고 소련의 신문 『프라우다』에서는 평양경제토론회를 비난한 논설을 게재했다. 논설은 평양토론회에 대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운동의 분열”을 추구하고, “사회주의 나라들을 비방”했다고 주장했다.²²⁾

조선로동당은 『로동신문』 논설을 통해 “비열한 중상”이라고 반박했다. 『프라우다』가 아세아 경제토론회가 다른 기구의 ‘승인’ 없이 조직되었다고 비판한 점에 대해서는 “아세아지역 나라 대표들이 자기들의 자주적인 의사에 의하여 조직한 독자적인 기구이다. 이와 같은 기구들은 서로 자매 관계에 있으며 그들 간에는 ‘승인’하거나 ‘종속’하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어쩌면 그렇게 『쁘라우다』의 소리와 『미국의 소리』가 신통히도 맞아떨어지는가?”라면서 대국주의자들의 “오만하고 무례하고 파렴치한 헛소리”라고 맞받아쳤다. 나아가 자신들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어떠한 민족, 어떠한 나라이건 혁명을 자체로 해야 하며 자기 민족의 운명을 인민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매개 나라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이며 혁명의 결정적 역량도 역시 그들이다. … (중략) … 전후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조선로동당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기 인민, 자체의 자원, 자신의 지혜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촉진시키는 방침을 견지하였다. 우리 인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풍전을 아껴서 인민경제 복구건설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며 없는 것

22) “누구의 이익을 위함인가?” 『프라우다』, 1964년 8월 18일(『로동신문』, 1964년 9월 7일).

을 만들어 내고 모자라는 것을 찾아내는 완강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만 경제 건설의 높은 속도를 견지하고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었다.

『프라우다』의 “빈궁과 낙후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믿음직한 길”은 “가장 발전된 개별적 사회주의국가”들과 경제적 협조와 원조에 의거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선로동당은 조선 민족의 운명을 소련에 맡기라는 것이라고도 반발했다. 소련의 평양방직공장과 흥남 비료공장 복구 건설 원조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들어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설비와 불수강판을 비롯한 자재를 주고 그 대신 조선에서 수십 톤의 금과 다량의 고귀한 유색금속과 원료들을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헐한 값으로 가져갔다”면서 소련은 예속적이며 불평등한 ‘경제협조’로써 부당한 이득을 챙긴다고 비판했다.²³⁾

조선로동당 기관지 『근로자』를 통해서도 “다른 나라 인민들에게 지원을 주면서 그 나라에 대한 자기의 ‘지배’를 노린다면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행동을 방불케 할 것”이라고 공격했다.²⁴⁾ 또한 “일부 사람들은 일련의 사회주의국가들에서 건설하고 있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폐쇄경제’니, ‘경제의 고립화’니 하면서 마치 그것이 사회주의경제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듯이 비방하고 있다. 그들은 오늘 사회주의국가들 간의 경제협조에서 새로운 단계가 도래했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체제 전반의 범위에서의 ‘단일한 경제기구’의 창설과

23) “왜 평양경제토론회의 성과를 헛뜯으려 하는가? 제2차 아세아 경제토론회에 대한 『쁘라우다』의 비방을 논박함,” 『로동신문』, 1964년 9월 7일.

24) “공산주의 운동과 혁명적 의리,” 『근로자』, 제13호(1964), 23~25쪽.

전체 사회주의진영의 ‘통합경제’를 주장”한다고 비판했다.²⁵⁾

북한이 평양회의에서 공개한 원조 수취 경험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과정에서 실제 체험을 통하여 얻은 지식이었다. “소련은 예측적이며 불평등한 ‘경제협조’로써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경제원조’의 어두운 뒷면에 대해 극히 일부 사례만 공개했지만, 북한의 경험은 자신들의 구체적 환경과 조건 속에서 실천을 통한 증명으로 얻은 생동한 것이었다. 북한이 창조한 실천적 경험을 일반화하면 이론적 지식이 된다. 북한의 제1차 5개년계획(1957~1961년) 시기 경제원조를 둘러싼 실천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 제1차 5개년계획(1957~1961년) 추진에 필요한 자금 수요 해결의 전환

1) 북한의 소련식 통합경제노선 탈피

북한이 공업의 기초를 마련하던 시기에 소련은 ‘썬브(경제호상원조이사회)’를 만들어 놓고,²⁶⁾ 북한도 거기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다. 1956년

25) 김상학,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사회주의 경제법칙,” 『근로자』, 제16호(1964), 9쪽.

26) ‘썬브(경제호상원조이사회)’는 1949년 1월 모스크바에서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체코 참여로 만들었다. 소련과 인민민주주의국가들의 경제 경험 교환과 기술원조 및 원료 식량 기계 시설품 등에 의한 원조를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소련 및 인민민주주의 제국 경제호상원조리사회 창설,” 『로동신문』, 1949년 1월 30일.

현재 소련은 391개소의 기업소들과 90개소 이상의 개별적 직장 및 시설들을 건설하는 사업에서 인민민주주의국가들을 지원했다. 또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총액 210억 루블에 달하는 장기 차관을 인민민주주의 제국(諸國)에 제공했다. 과학기술상 협조도 컸고, 특히 원자력 생산 및 평화적 이용의 조직에서 우호적 국가들에만 협조했다.²⁷⁾

하지만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악전고투’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이익을 포기했다. 북한은 소련 주도의 ‘통합경제’노선이 경제적 자립의 길을 가로막고 정치적 구속을 가져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일성 수상은 이 시기를 회상하며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 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공고한 원료 기지를 축성함으로써 모든부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²⁸⁾

2) 계획 추진을 둘러싼 북한과 소련의 인식 차이

북한의 인민경제계획화에서 최초의 5개년계획은 1957년부터였다.

27) 박문성,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사회주의국가들 간의 경제적 협조,” 『로동신문』, 1956년 9월 7일.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 회의에서 한 내각 수상 김일성동지의 연설,” 『로동신문』, 1962년 10월 24일.

김일성 수상은 1956년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5개년계획’을 처음 언급하며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의거하면서 농업과 경공업을 보다 급속히 발전시켜야 하며 그 기초 위에서 인민들의 물질적 복리를 도모”시킬 사회주의공업화노선을 당의 총노선으로 제시했다.²⁹⁾ 대회에서는 제1차 5개년계획 실행의 기본 방향을 “국가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확고히 축성하며 농업의 사회주의적 집단화를 실현함으로써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 즉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확고히 견지하며 인민경제에서의 기술적 개진 및 노동생산능률의 제고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경제 부문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하고 농업 및 경공업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키자고 결정했다.³⁰⁾

김일성은 제1차 5개년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 1956년 6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국가 및 몽골을 방문했다. 1956년 7월 9일, 김일성은 소련의 흐루쇼프 등을 만나서 소련 원조 없이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부탁했다. 이와 관련하여 “차관과 전시 비무역지불에 의해 진 빛의 상환 면제”를 소련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흐루쇼프는 소련 정부가 조선 정부의 요청을 검토할 것이지만, 먼저 식량 문제 해결과 어업 발전 및 시멘트공업 발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³¹⁾ 이미 소련은 김일성이 언급한 지원 제공

29)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의 중앙위원회 사업총결보고,” 『로동신문』, 1956년 4월 24일.

3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결보고에 대한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의 결정서,” 『로동신문』, 1956년 4월 30일.

31) “1956년 7월 9일 불가닌, 흐루쇼프, 브레즈네프, 셰필로프, 바이마코프, 포노마

을 상환 면제가 아닌 약 5억 6천 루블 차관으로 설정하고자 했다.³²⁾ 북한이 관심을 가진 중공업과 기계제작공업에 대한 논의는 아예 없었다. 당시 소련은 북한의 '주체적 공업' 기초 축성에 대해 "과대망상적인 것이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며 대폭 축소하라고 간섭했다.³³⁾ 김일성은 불만이 컸지만, 소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김일성은 소련 방문을 총화하며 "형제적 나라들의 우수한 경제 건설경험들을 충분히 참작하면서 제3차 당대회가 제시한 기본노선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인민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민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알맞게 계획 작성, 현존 설비이용률과 노동생산능률 제고로 내부 원천 최대한 동원, 국제분업에 기초하여 자체 역량으로는 실행하기 어렵고 수요가 적은 사업의 중단 등을 결정했다.³⁴⁾

북한이 1955년을 전후하여 '주체'를 내세운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

료프 동지와 조선 정부 대표단의 회담록," 『모스크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 직원들과 소련 외무성 직원들의 면담록』,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고 장서 0102, 목록 12, 문서철 68, 문서 3.

32) "몰로토프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수상 최용건의 당면 회견에 대하여(1956.2.27.)," 『모스크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 직원들과 소련 외무성 직원들의 면담록』,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고 장서 0102, 목록 12, 문서철 68, 문서 3.

33) 고정웅·리준향, 『조선로동당의 반수정주의 투쟁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85쪽.

34) "형제적 국가를 방문한 정부 대표단의 사업총화와 우리 당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관하여(전원회의 결정 1956년 8월 30일~31일)," 『결정집(1956년도 전원회의, 정치, 상무, 조직 위원회)』, 2쪽.

다. 그런데 김일성과 조선로동당은 ‘주체’를 제기하고도 현실 정치에서 주춤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련으로부터 선진 과학기술 도입이 절실했기 때문이다.³⁵⁾ 특히 북한은 1955년부터 1961년까지 원자력 분야에서 소련과 협력했고,³⁶⁾ 1956년 7월, 모스크바에서 〈연합원자핵연구소 설치에 관한 협정〉에 참가했다.³⁷⁾ 당시 “쏘베트과학은 세계 과학의 최고 절정”으로서 전자공학과 원자에너지 분야의 위업,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성공,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통한 우주 정복 첫 걸음 등을 이뤄냈다.³⁸⁾ 이런 사정이 있어 북한은 크게 떠들거나 내세우지 않고 ‘자립적 공업화’의 실질적 진전에 매진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로동당의 8월 31일 결정은 결국 소련에 ‘보여주기’였다. 북한은 결정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고, 또 뒤에 살펴보겠지만 소련 중심의 새로운 국제분업체계에 일치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3) 소련 원조의 급감과 축적 원천의 자체 조달로의 전환

북한은 자주적 공업화의 본격적인 기초건설을 5개년계획 수행 시기부터 시작했다. 과업 실현을 위한 자금 축적의 조성 문제가 부담으로

35) 소련은 조소과학기술협조위원회를 통하여 1956년부터 1957년 상반기까지 170여 건의 기술 문건을 제공했다. 리기영, “위대한 소련은 조선 인민의 해방자이며 진정한 원조자이다,” 『로동신문』, 1957년 8월 13일.

36) 1961년 중단되었다가 1985년에 재개했다. “조·쏘 두 나라 인민 사이에 친선 단결은 영구불멸하리!” 『로동신문』, 1985년 8월 17일.

37) “연합원자핵연구소 설치에 관한 협정,” 『로동신문』, 1956년 7월 15일.

38) 도상록, “쏘베트과학의 위력,” 『근로자』, 제1호(1958), 47~53쪽.

작용했다.³⁹⁾ 게다가 북한의 국가예산 수입에서 대외원조 수입 비중은 1954년 34%, 1955년 21.7%, 1956년 16.5%, 1957년 12.2%, 1958년 4.2%, 1959년 2.7%, 1960년 2%로 꾸준히 감소했다.⁴⁰⁾

조선로동당에서는 축적 원천을 자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노동생산능률 제고와 원가 절하였다.⁴¹⁾ 노동생산능률 제고는 기술 개진, 생산의 기계화와 전기화, 현존 설비이용률 향상, 노동규율 강화, 노력 경쟁 확대 등에 영향받으며 상호 밀접하게 작용한다. 1956년 당시 북한 기계 설비의 현대화와 이용률은 모두 낮았다. 기계 간 생산 능력 불일치, 돌격식 생산 조직에 따른 기계 휴사·고장·휴지 상태, 기능공 부족 등도 문제였다. 일부 기업소들은 생산계획과제 미달성으로 유관 기업소 계획과 기계설비 이용률에 지장을 주었다.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과 수입 절약 등의 수준도 낮았다.⁴²⁾

39) “빛나는 주체공업의 위용: 산업국유화법령 발표 35돐을 맞으며,” 『로동신문』, 1981년 8월 10일.

40) 1959년 수치는 김상학,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우리 당의 경제정책,” 『근로자』, 제1호(1960), 29쪽 참조. 그 외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 회의(1960.2) 예산 보고.

41) 북한에서는 자금 축적의 현실적 증대 방안으로 첫째, 여유분 일부의 개인 이득으로 전환 방지, 둘째, 기업소 내부에서 준비금 축적, 셋째, 외환 획득과 절약, 넷째, 국가 수중에 예비금 축적, 다섯째, 내부 자원의 조사와 경제 복구 건설 동원, 여섯째, 부유 계층에의 부당 축적 방지 등을 제기했다. 김환, “축적은 인민경제 복구 발전의 중요한 담보,” 『근로자』, 제11호(1953), 59~61쪽; 한규학,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축적 증대와 그에 있어서 노동생산능률 제고가 가지는 의의,” 『근로자』, 제11호(1956), 66~80쪽.

42) 안광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경제 축적,” 『로동신문』, 1956년 8월 27일. 외화 확보를 위한 수출원천 탐구개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북한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새 기계와 기술 도입, 노력 조직의 합리화, 생산행정의 효율적 개편 및 기계화 등을 실행했다.⁴³⁾ 자금 축적의 또 다른 원천인 농업 등에서 축적을 늘려 중공업 건설에 우선 돌리기도 했다.⁴⁴⁾ 자금의 축적과 분배를 조정하여 매년 국가예산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도록 했고, 화폐 유통을 강화하며 ‘원’의 구매력을 높였다. 그 결과 외국의 무상원조가 줄어 든 조건에서도 5개년계획을 국내 축적 원천으로 수행할 재정토대를 구축해 나갔다.

북한 공업 생산은 이미 1956년에 1946년에 비하여 6배 성장했으며, 1957년 한 해 동안에 1946~1949년까지 4년간 생산량에 해당하는 공업 제품들을 생산했다. 질적 구성에서도 공업 총생산액 가운데 기계 제작 및 금속가공 공업 비중을 계속 높여 갔다.⁴⁵⁾

1956년 12월 11~13일 개최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경제적 조건의 조성과 관련하여 그리고 경제의 가일층의 양양을 위하여 우리 앞에는 일련의 중요한 경제적 문제들 즉 일체 물적 및 인적 자원들과 재정을 엄격히 절약하며 상품 생산을 백방으로 확대하여 외화를 적극 획득하고 절약하는 문제들이 더욱 중요하게 나

일부 부문에만 국한되었다. 수출품의 질, 규격, 포장 등의 규정도 없어 상품의 대외적 신용을 훼손시켰으며, 수출 물자들을 체화하기도 했다. 최국보, “외화 획득과 외화 절약은 전 인민적 과업이다” 『근로자』, 제8호(1956), 31~32쪽. 대외수출품 구성을 보면 광물, 원료, 반제품의 비중이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가공 완제품의 비중이 적었다[리종수, “외화문제의 원만한 해결은 제1차 5개년계획 수행 보장의 중요 담보,” 『근로자』 제10호(1957), 81쪽].

43) 허동, “생산원가 저하를 위한 제 문제,” 『근로자』, 제1호(1954), 98~104쪽.

44) “사회주의 농촌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63.12.23),” 『김일성저작집』 제17권, 527쪽.

45) “위대한 전변의 10년,” 『로동신문』, 1958년 7월 17일.

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경제적 조건의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소련과의 관계 등 외부 상황의 비우호적 전개를 말한 것이다. 제1차 5개년계획 실행 첫해인 1957년도 계획의 기본과업으로 경제의 주도 부문인 중공업 특히 금속, 석탄, 화학, 기계, 전력 공업부문의 급속한 복구 및 발전 추진을 결정했다. 김일성은 1957년도 계획 실행에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동원을 지시했다.⁴⁶⁾ 이 회의는 북한의 ‘주체적 공업화’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른바 ‘8월 종파사건’ 이후 조선로동당이 안팎으로 처했던 어려운 시기에 소집되었고, 천리마운동의 시초를 열었기 때문이다.⁴⁷⁾ 12월 전원회의에서는 추가적 투자를 전혀 하지 않거나 적게 하면서 더 많은 생산을 냄으로써 계획의 초과 완수를 호소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중적 증산 경쟁운동이 추진되었다.

북한이 자력으로 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북한 주재 소련 대사 푸자노프는 홍명희 부수상에게 북한 산업정책이 ‘폐쇄경제’ 구축이라고 비난했다.⁴⁸⁾ 1957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현존 생산면적, 현존 생산설비능력을 최대한으로 동원 이용하는 원칙에서 기본건설투자를 분배할 것”을 결정했다. 추가적 투자 없이 생산 증가를 호소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꼭 요구되는 금속, 석탄, 전

4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로동신문』, 1956년 12월 15일.

47) “사실: 민주수도 평양시 건설자들의 위대한 발기,” 『로동신문』, 1958년 6월 6일. 이때 처음으로 ‘천리마’ 용어가 등장했다.

48) “푸자노프 일지(1957. 4.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와 면담기록』,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고 장서 0102, 목록 13, 문서철 72, 문서 5.

기, 화학 공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면서, 기타 공업부문에 대한 투자와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긴축하며 국가 재정균형을 맞춰 나갔다.⁴⁹⁾ 추가적 투자와 설비 확충 없이도 생산을 증가하는 방식은 북한의 경제계획화 추진에서 중요한 특징이었다.

지금까지 소개한 관련 연구 중에서 당시 소련 상황에 대해 언급한 연구는 없었다. 조선로동당은 소련으로부터 경제원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1957년 4월 19일에 소련공산당과 소련 내각은 국제 발행 증지와 상환 연기를 결정했다. 소련은 무상으로 납을 도와 줄 형편이 아니었다.⁵⁰⁾

1957년 4월 22일 조인한 의정서에서 조선은 소련에 “지난해와 같이 연, 아연정광, 유색금속광, 선철, 합금철, 화학공업제품, 과실, 모피, 기타 상품들을 납입할 것”이며, 소련은 조선에 “공업설비, 자동차, 원유제품, 관류, 케이블, 화학제품, 고무제품, 의약품, 과린산석회, 면화” 등의 납입할 것을 명시했다.⁵¹⁾ <1958년도 상품 호상 납입에 관한 의정서>에도 1958년 1월 9일에 조인했지만, 큰 차이가 없었다.⁵²⁾

북한은 두 차례 의정서를 통해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것

49) 안광준, “제1차 5개년계획 실행과 자금문제,” 『로동신문』, 1957년 4월 5일;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58년 국가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과 1960년 국가예산안에 관한 보고, 재정상 송봉옥 대의원,” 『로동신문』, 1960년 2월 26일.

50) “국제 발행 증지에 관한 결정 채택,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에서,” 『로동신문』, 1957년 4월 21일.

51) “조선과 소련 간의 1957년 상품 호상납입에 관한 의정서 조인,” 『로동신문』, 1957년 4월 24일.

52) “조소 양국의 1958년도 상품 호상납입에 관한 의정서 조인,” 『로동신문』, 1958년 1월 11일.

들을 제대로 얻지 못했고, <인민경제발전 제1차 5개년(1957~1961)계획>을 두 번째 해인 1958년 3월 3일에야 처음 공개했다.⁵³⁾ 1년 이상 발표가 늦어진 이유는 소련 등과의 상품 납입 및 경제협조 협상 지연 때문이었다.⁵⁴⁾ 1958년 6월에 개최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3차 회의에서는 <인민경제발전 제1차 5개년(1957~1961)계획에 관한 법령>을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토대를 확고히 축성함으로써 우리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낙후성을 완전히 퇴치하고 민중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장차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며 더욱 대규모적 기본건설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물질적 및 기술적 조건 준비”였다.⁵⁵⁾

조선로동당에서는 절약과 축적을 위한 투쟁을 5개년계획 수행에서 중심 과업으로 내세웠다. 왜냐하면 5개년계획에서 국가 기본건설 투자액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3개년계획 기간에 비해 109%로 높였지만, 외국 원조는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원천을 동원하여 자체로 계획 실행에 필요한 자금 수요를 해결해야 했다.⁵⁶⁾ 조선로동당

53) “조선로동당 제1차 대표자회 개막,” 『로동신문』, 1958년 3월 4일; “조선로동당 제1차 대표자회 결정서,” 『로동신문』, 1958년 3월 8일.

54) 김일성이 Puzanov 소련대사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은 1957년 상반기에 기본적 통계수자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계획초안을 만들었다. “뽀자노브 일지 (1957.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의 일지와 면담기록』,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고 장서 0102, 목록 13, 문서철 72, 문서 5.

5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1차 5개년(1957~1961)계획에 관한 법령,” 『로동신문』, 1958년 6월 12일.

56) 로성국, “제1차 5개년계획기간에 있어서의 축적과 소비,” 『근로자』, 제4호(1958), 26쪽; 안광준, “제1차 5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자금문제와 그의 해결방도,” 『근로자』, 제5호(1958), 22쪽.

제1차 대표자회 결정서는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노동생산능률을 제고하며 온갖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 이용하며 엄격한 절약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제1차 5개년계획의 수행에 있어서 중심문제”라고 제기했다.⁵⁷⁾

인민경제발전 제1차 5개년(1957~1961)계획을 시작할 즈음부터 북한과 소련 관계는 이전과 달라졌고, 북한을 어려움에 빠뜨렸다. 북한이 소련 중심의 새로운 국제분업체계에 일치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 등이 작용했다.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각 나라가 이미 설정한 계획까지 바꾸며 1956~1960년 5개년계획을 일치시켜 추진함으로써 협조를 확대·심화시켰다. 하지만 북한은 독자적인 5개년계획을 작성하여 1957년부터 운영했다. 소련은 1956년 10월 30일에 “사회주의나라들 간의 경제적 연계의 가일층의 발전 및 강화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들을 공동으로 토의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에 파견했던 고문들을 소환했다.⁵⁸⁾

북한과 소련은 1957년 6월 3일부터 국경선 협약 회담도 시작했다.⁵⁹⁾ 1957년 8월, 소련은 북한에 일반적 국가 관계에 필요한 각종 협

57) 당시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자금문제 해결 방도는 “절약하여 증산하자”로서 첫째, 추가적 투자 없이 또는 적은 투자로써 생산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온갖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 이용, 둘째,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노동생산능률을 부단히 제고하여 생산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함으로써 내부축적 원천을 급속히 증대, 셋째, 축적된 자금을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 제고였다. 안광준, “제1차 5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자금문제와 그의 해결방도,” 『근로자』, 제5호(1958), 25쪽.

58) “소련과 기타 사회주의국가들 간의 친선 협조의 발전 및 그 가일층의 강화의 기본에 관한 소련 정부의 선언,” 『로동신문』, 1956년 11월 1일.

59) “뿌자노프 일지(1957.6.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의 일지와 면담기록』,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고 장서 0102, 목록 13, 문서철 72, 문서 5.

약 체결 방침을 전달했다. '당' 대 '당'의 관계가 일반 국가 사이의 관계로 한 단계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우호적 원조가 없어진 이 시기와 관련하여 “우리는 1957년과 같이 나라의 형편이 곤란한 시기에도 대중의 양양된 혁명적 열의를 옹계 조직 동원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이룩한 고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했다.⁶⁰⁾ 소련과의 갈등을 반영하며 북한의 자립경제 건설에서 국제적 연관성이나 분업에 대한 언급도 점차 줄어들었다.

당시 북한은 중공업을 우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체 조건과 가능성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첫째, 풍부한 자연자원이 있었다. 북한의 중공업 기업소들은 특수한 것 외에 국내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일본제국주의가 조선 약탈을 위해 개발한 전력과 자원 시설이 있었다. 전쟁으로 파괴됐지만 발전소, 제철소, 제련소, 화학공장 등을 복구해 확장할 수 있었다. 셋째, 중공업을 발전시킬 기술도대와 기술인재들이 있다. 해방 후 공장을 복구하여 생산을 관리한 경험이 있고, 전쟁 시기부터 많은 기술자와 유학생을 외국에 파견하여 선진 기술을 습득케 했다.⁶¹⁾

실제 3개년계획 기간 공업부문에 대한 국가 기본건설 투자총액 가운데 중공업과 경공업 비중이 81.1%와 18.9%였다면 제1차 5개년계획 기간에는 82.6%와 17.4%로, 오히려 중공업 투자 비중을 1.5% 올려 수

60) 한삼영,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근로자』, 제6호(1965), 20쪽. 신근필도 “1956~1957년의 어려운 시기”란 표현을 썼다[신근필,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을 병진시키는 우리 당의 노선,” 『근로자』, 제8호(1967), 22쪽].

61) 최재우, “우리나라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의 현실적 가능성과 조건,” 『근로자』, 제8호(1957), 53~55쪽.

행했다.⁶²⁾ 북한의 총생산액 중에서 공업과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6년에 공업 생산이 60%, 농업 생산이 40%였다면, 1957년에는 각각 65%와 35% 정도를 바꾸며 북한은 ‘자립적 공업-농업국가’로 자리 잡아 갔다.⁶³⁾

북한이 자립적 공업의 기초를 닦으려면 공업 생산구조를 개편해야 했다. 조선로동당은 기계제작공업 발전에 힘을 넣으면서 원료 원천과 제품 수요를 타산하며 공업의 현대성과 자주성, 다면성을 보장하도록 했다.⁶⁴⁾ 경제 건설을 주로 자체 힘으로 진행할 조건에서 외화 획득 증대와 외화 절약 강화에도 힘을 기울였다. 거액의 기계설비와 공업 원료 수입이 외국에 지불할 수 있는 외화 한도 내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⁶⁵⁾

1957년에 금속공업부문의 황해제철소, 김책제철소, 성진제강소, 강선제강소, 청진제강소, 남포제련소,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대안전기공

62) 김태근, “기본건설에서 당 정책 관철을 위한 몇 가지 문제,” 『근로자』, 제13호(1962), 32쪽. 그런데 완충기였던 1960년에는 중공업과 경공업 비중을 80.6%와 19.4%로 조정하였다. 정태식, 『우리 당에 의한 속도와 균형문제의 창조적 해결』(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144쪽.

63) 리석심, “농업국으로부터 공업-농업국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근로자』, 제1호(1958), 57~58쪽.

64) “공업분야에서 주되는 과업은 현대적 공장들을 더욱 많이 신설하며 기존 공장들을 개건 ... (중략) ... 먼저 인민경제의 전반적 발전의 기초로 되는 금속, 전력, 기계, 석탄, 화학 및 건재 공업들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약한 고리로 되고 있는 기계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동시에 인민생활의 부단한 향상을 위하여 경공업의 급속한 발전도 예견하여야 한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결보고에 대한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 결정서, 『로동신문』, 1956년 4월 30일).

65) 문정택, “외화 밸런스의 균형을 위한 제 대책,” 『로동신문』, 1957년 5월 27일.

장, 락원기계공장, 기양기계공장, 평양전기공장, 평양방직기계제작소, 청진조선소, 서평양철도공장, 원산철도공장, 중앙자동차수리공장, 화학부문의 흥남비료공장, 본궁화학공장,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 등의 기업소들은 국가계획과 증산과제를 초과 달성했다.⁶⁶⁾ 이러한 성과를 “조선로동당의 전후 경제 발전 총노선의 빛나는 승리”로 선전했다.⁶⁷⁾

1958년 9월, 과학원 역사연구소가 주최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인민민주주의의 발생과 발전에 관한 전국과학토론회’를 계기로 북한 학계는 ‘자력혁명’을 강하게 주장했다. 조선로동당은 정권 수립 직후 소련의 ‘후견’을 받았던 역사적 사실까지 무시하며, 1945년 이후 북한의 역사를 “자체의 인민민주주의혁명의 발전과정”이라고 주장했다.⁶⁸⁾

조선로동당이 ‘자력혁명’을 주장하면서 공업화 추진 형편도 더욱 어렵고 복잡해졌다. 북한의 경제력은 아직 미약했고, 인민의 살림살이도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조건에서 조선로동당은 주체적 공업화 추진을 내부 예비에 대한 탐구·동원 및 ‘자체의 힘’으로 천리마운동 등을 통해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4) 자체 힘으로 홀로서기와 소련의 협조 구하기

1958년 9월 8일 개최한 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경축대회에서 김

66) “195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계획 실행총화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의 보도,” 『로동신문』, 1958년 1월 19일.

67) “우리 당 경제정책의 빛나는 승리,” 『로동신문』, 1958년 1월 21일.

68) “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과학토론회 진행,” 『로동신문』, 1958년 9월 7일.

일성은 5개년계획 수행 성과와 관련하여 “우리 당이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공업 및 농촌 경리의 새로운 양양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광범한 건설사업을 보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만 우리는 파괴된 인민경제를 급속히 복구하고 짧은 시일 내에 인민생활을 개선할 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경제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자체의 물질적 토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⁶⁹⁾ 다른 한편으로 제1차 5개년계획 수행에서 소련과 인민민주주의국가들의 지원에 대한 감사도 빼 놓지 않았다.⁷⁰⁾ 북한은 소련이 준 원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중공업의 골간을 이루는 공업기업소 20여 개를 복구 건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⁷¹⁾

북한은 1958년 및 1959년 국가 예산 집행에서도 자금 수요를 주로 내부 축적으로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예비까지 조성하며 재정 토대를 구축했다. 조선로동당은 이것을 북한 ‘국가 재정의 공고성과 자주성 실증’으로 선전했다. 조선로동당은 국가 예산의 원만한 집행을 위하여

6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경축대회에서 한 김일성의 기념보고,” 『로동신문』, 1958년 9월 9일.

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소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진영 국가들과 함께 그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으면서 발전되었으며 공고화되었습니다. 나는 이 뜻깊은 명절에 제하여 전체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우리 인민을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었으며 우리 공화국의 융성 발전을 위하여 물심 양면의 원조를 아끼지 않고 있는 위대한 소련 인민에게 충실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립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경축대회에서 한 김일성 수상의 기념보고,” 『로동신문』, 1958년 9월 9일).

71) “조선공업기술총련맹 제2차 대회에서 한 조선공업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김두삼 위원장의 사업결산보고,” 『로동신문』, 1957년 11월 21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기업소들에서 독립채산제를 강화하며 일체의 낭비현상과 완강히 투쟁하며 언제 어디서나 국가에 손실을 끼칠 것이 아니라 이익을 주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구호가 아닌 실제에서 모든 경제기관·기업소들에서 재정규율 확립, 국고 납부의무 준수 및 현금 지출에 대한 통제 등을 강화했다.⁷²⁾

조선로동당이 국가 재정토대의 공고성과 자주성을 선전했다고 해서 소련으로부터의 경제 협조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 김일성은 북·소 양국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10년을 축하하여 1959년 3월 17일 자 『프라우다』에 “위대한 소련 인민은 조선 인민을 해방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과 나라의 자주 독립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 막대한 원조와 지지를 주고 있다”면서 “소련을 향하여 더 많이 배우면서 소련 인민이 나아가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 건설과 공산주의의 승리를 향하여 용감하게 전진할 것”이라고 기고했다.⁷³⁾ 북한은 자주적 공업화를 통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원했던 것이지, 결코 소련과의 경제협조 강화까지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72) 최병철, “현 시기 독립채산제를 강화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근로자』, 제2호(1960), 53-55쪽.

73) “소련 인민과의 친선과 연대성은 우리의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로동신문』, 1959년 3월 20일. 조선로동당은 8·15해방 15주년에 제(際)하여 1960년 5월 15일에 발표한 전체 조선 인민에게 보낸 호소문에서도 “우리의 해방자이며 친근한 벗이며 진정한 원조자인 형제적 소련 인민과 그의 정치적 수령인 소련공산당에 전 민족적인 축하와 감사”를 표하였다[“조선인민의 민족적 명절 8·15해방 15주년에 제하여 전체 조선 인민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호소문,” 『로동신문』, 1960년 5월 16일.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되었지만, 완전히 틀어진 것은 아니었다.

김일성은 5개년계획 수행에서 “기술혁명은 곧 기계공업의 대대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사실 기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주장하며 공업 생산공정의 전기화, 기계화, 자동화를 제기했다.⁷⁴⁾ 김일성은 사회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 수행을 위해 철과 기계의 우선적 생산도 계속 지시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58년 9월 전원회의는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구호와 함께 “금속공업 발전을 촉진시킬 데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내 놓았다.⁷⁵⁾ 1959년 1월 19일 개최한 내각 제1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현대적 공업 창설과 발전, 경제의 기술적 개건과 기술혁명 수행에서 전환을 주장했다.⁷⁶⁾

5) 계획 완수와 의의

1959년 7월 15일,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은 <1959년 상반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계획 실행총화>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인민경제발전 제1차 5개년(1957~1961년)계획에 착수한 지 2개년 반을 경과하면서 “우리나라는 자립적인 민족공업을 가진 공업-

74) 김일성은 “오늘 조선 사람이 다 천리마를 타고 다 영웅이 된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양양된 혁명적 고조를 가일층 높이며 모두 다 천리마를 타고 제1차 5개년계획을 1년 반 앞당겨 완수”할 것 등도 요구했다. “전국생산혁신자대회에서 김일성 수상 연설,” 『로동신문』, 1958년 9월 19일.

7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 금속공업 발전을 촉진시킬데 대하여,” 『로동신문』, 1958년 9월 28일.

76)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내각 제1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59.1.19.),” 『김일성전집』 제23권, 94~96쪽.

농업국가로 전변”했으며,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수준도 현저히 향상”했다고 밝혔다. 특별한 역사적 의미는 “공업부문 전체 근로자들은 1959년 6월 말에 이르러 제1차 5개년계획을 공업 총생산액에서 완수”였다.⁷⁷⁾

북한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1차 5개년계획의 완수는 커다란 정치경제적 의의를 가진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 북한은 전후 불과 5~6년 만에 자립적 경제의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적 공업-농업국가’로 전변했다. 경제에서 식민지적 편파성을 청산하는 역사적 과업을 수행했으며, 중공업 생산량을 전후 5년간 연평균 52% 속도로 성장시키는 전진을 이뤘다.⁷⁸⁾ 주목할 점은 자립적 공업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다면적이며 자주적인 공업 생산구조’로의 질적 변화였다. 그것은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기술적 토대 강화와 전문화된 기술간부 구성 개선, 생산 규모와 품종 확대, 각종 노동수단 생산을 포함한 완제 가공품 생산 성장으로 나타났다. 공업부문 구조상의 질적 변화는 중공업과 경공업, 생산수단과 소비재, 개별적 공업부문의 상호 간 발전 속도의 균형관계를 유지하며 부문 구조상에서 자립성을 보장했다.⁷⁹⁾

77) “1959년 상반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계획 실행총화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의 보도,” 『로동신문』, 1959년 7월 16일.

78) “위대한 승리, 빛나는 총화. 195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계획 실행총화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의 보도,” 『로동신문』, 1960년 1월 17일.

79) 남인호, “1959년 인민경제 계획의 승리적 완수를 위하여,” 『근로자』, 제2호(1959), 83쪽; 리명서, “제1차 5개년계획기간 공업 생산의 높은 장성속도와 그의 몇 가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59년 12월 확대전원회의에서는 1961년부터 새로운 제2차 5개년계획 수행을 결정했다. 1960년을 경제 발전에서 완충기로 규정했는데, “계획 수행행정에서 일부 경제부문에 조성된 긴장성을 풀며 약한 고리를 추켜세우고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⁸⁰⁾ 1960년 국가 예산에서 특기할 사실은 지방공업 발전에 따른 지방 예산 규모의 성장이다. 국가 예산에서 지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8년 16.0%, 1959년 24.3%, 1960년 32.9%로 높아졌다. 지출에서는 농기계작업소 설비 구입과 기계제작공업 및 인민생활 향상에 더 많은 자금을 배당했다.⁸¹⁾

조선로동당은 완충기 설정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의 하나인 속도와 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경제 발전의 속도 문제는 사회주의 건설의 가장 기본 문제이다. 북한과 같은 낙후한 나라가 이미 발전한 나라를 따라잡기 위하여, 또 남한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속도 문제는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경제의 각기 다른 부문들과 측면들이 균형을 유지해야 물자, 노력, 재정,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보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경제의 높은 발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높은 속도는 동시에 균형을 급속한 변화를 어쩔 수 없이 초래한다. 조선로동당에서는 균형보다 속도를 우선시하면서도 균형 또한 고려했다.⁸²⁾

요인,” 『근로자』, 제9호(1959), 36~38쪽; 방호식, “제1차 5개년계획의 기한전 완수와 우리나라 공업의 비약적 발전,” 『로동신문』, 1960년 2월 18일.

8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2월 확대전원회의에 대한 보도,” 『로동신문』, 1959년 12월 6일.

81) “사설: 완충기의 인민적 예산,” 『로동신문』, 1960년 2월 27일.

1960년 1월 16일 발표한 <195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 발전계획 실행총화>에는 계획을 수행한 3년 동안 공업 총생산액이 매년 평균 44.6% 성장했다고 밝혔다.⁸³⁾ 제1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북한의 공업 총생산액은 본래 예견했던 목표를 크게 상회하여 전년 대비 1957년 44%, 1958년 42%, 1959년 53%라는 “놀라운 속도로 해마다 격증”했다. 1957년에서 1960년까지 공업 총생산액 성장률은 전후 복구 발전 3개년계획 동안의 공업 생산액 성장률보다 높았다.

1960년 11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 회의에서 부수상 리종옥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며 경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킨 결과 5개년계획 기간에 공업의 각 부문에서 비약적 전진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공업의 부문별 구성에서도 근본적인 변동”을 보고했다. 그는 “자체의 기계제작공업을 가진 자립적 중공업으로 개편되었으며 경공업의 기지가 새로 창설”하여 사회주의 공업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민족공업의 자주성과 다면성” 강화 사실을 확인했다.⁸⁴⁾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은 완충기였던 1960년 인민경제 발전계획 결과에 대하여 “일부 인민경제부문에 조성된 긴장성을 풀며 약한 고리를 추켜세우고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데 대한 완충기의 중심

82) 최중국, “우리나라 인민경제 발전에서의 속도와 균형,” 『근로자』, 제3호(1963), 33쪽.

83) “195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 발전계획 실행총화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의 보도,” 『로동신문』, 1960년 1월 17일.

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1차 5개년(1957~1961)계획 실행총화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 회의에서 한 내각 부수상 리종옥 대의원의 보고,” 『로동신문』, 1960년 11월 23일.

과업 수행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했다고 발표했다.⁸⁵⁾ 이런 노력과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소련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북한 경제에 대한 일부 연구들은 정책 추진의 맥락에 대한 고려도, 구체적 분석도 없이 현재의 관점에서 결과론적으로 재구성하거나 해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련의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그것을 평가할 실제 자료를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다.⁸⁶⁾ 따라서 원조받았던 북한 경험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북한이 5개년계획을 시작한 1957년은 나라 형편이 지극히 곤란한 시기였다. 북한은 축적 원천을 외부로부터의 원조를 대신하여 점차 내부로부터의 조달로 바뀌 나갔고, 내부 예비에 대한 탐구·동원 및 대중운동 강화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5개년계획을 일찌감치 달성했다. 북한 주민은 이 시기를 “전설 속의 천리마가 날았던 대진군의 나날”로 기억했고, 원조를 받던 처지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대외협력을 제공하

85) “완충기 과업 수행에서의 위대한 승리, 1960년 인민경제발전계획 실행총화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의 보도,” 『로동신문』, 1961년 1월 20일.

86) 양문수는 북한에 대한 소련 원조가 1950년대까지 북한 경제 성장에 기여했지만, 그것이 북한 경제 성장에 공헌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성과를 거둔 원조도 있지만, 쓸모없거나 영향을 주지 못한 원조도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양문수, 『북한 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311~312쪽.

는 나라로 탈바꿈하며 위신을 높여 나갔다.

소련이 제공한 원조와 차관은 북한 경제의 각 부문에서 공여국의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작용했지만, 북한은 제1차 5개년계획 추진을 전환점으로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다르게 대외 종속과 외세 의존이 아닌 독특한 성격의 사회주의국가로 나아갔다. 북한은 이후 소련으로부터 받았던 경제원조 경험을 부정적으로 공개하며, 자체 힘으로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주창했다. 이럴 때에만 다른 나라와의 국제적 협조관계도 건전한 토대 위에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외부의 '진정한 원조'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1964년 “평양선언”처럼 이해했던 것이다.

■ 투고: 2024.10.14. / 수정: 2024.11.27. / 채택: 2024.12.05.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고정웅·리준항, 『조선로동당의 반수정주의 투쟁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김한길, 『현대조선력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리영환 외, 『조선통사 개정판』 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6).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사회주의건설사 3』 제30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전영률 외, 『조선통사 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정태식, 『우리 당에 의한 속도와 균형문제의 창조적 해결』(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일성저작집』 제1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김일성전집』 제2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_____, 『결정집(1956년도 전원회의, 정치, 조직, 상무 위원회)』.

2) 논문

“권두언: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 『근로자』, 제12호(1963).

김상학, “제1차 5개년계획 기간에 중공업에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경공업 및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정책,” 『근로자』, 제3호(1958).

_____,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우리 당의 경제정책,” 『근로자』, 제1호(1960).

_____,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사회주의 경제법칙,” 『근로자』, 제16호(1964).

김환, “축적은 인민경제 복구 발전의 중요한 담보,” 『근로자』, 제11호(1953).

김태근, “기본건설에서 당 정책 관철을 위한 몇 가지 문제,” 『근로자』, 제13호(1962).

남인호, “1959년 인민경제 계획의 승리적 완수를 위하여,” 『근로자』, 제2호(1959).

“논설: 공산주의운동과 혁명적 의리,” 『근로자』, 제13호(1964).

도상록, “쏘베트과학의 위력,” 『근로자』, 제1호(1958).

로성국, “제1차 5개년계획기간에 있어서의 축적과 소비,” 『근로자』, 제4호(1958).

리명서, “제1차 5개년계획기간 공업 생산의 높은 장성속도와 그의 몇 가지 요인,” 『근로자』, 제9호(1959).

리석심, “농업국으로부터 공업-농업국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근로자』, 제1호(1958).

리중수, “외화문제의 원만한 해결은 제1차 5개년계획 수행 보장의 중요 담보,” 『근로자』, 제10호(1957).

신근필,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을 병진시키는 우리 당의 노선,” 『근로자』, 제8호(1967).

안광준, “제1차 5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자금문제와 그의 해결방도,” 『근로자』, 제5호(1958).

전용식,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노선과 그의 위대한 생활력,” 『우리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의 승리: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 기념 논문집』(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1).

최국보, “외화 획득과 외화 절약은 전 인민적 과업이다,” 『근로자』, 제8호(1956).

최병철, “현 시기 독립채산제를 강화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근로자』, 제2호(1960).

최재우, “우리나라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의 현실적 가능성과 조건,” 『근로자』, 제8호(1957).

최중극, “우리나라 인민경제 발전에서의 속도와 균형,” 『근로자』, 제3호(1963).

한규학,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축적 증대와 그에 있어서 노동생산능률 제고가 가지는 의의,” 『근로자』, 제11호(1956).

한삼영,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근로자』, 제6호(1965).

허동, “생산원가 저하를 위한 제 문제,” 『근로자』, 제1호(1954).

3) 신문

『로동신문』, 1947년 8월 21일; 1949년 1월 30일; 1953년 12월 22일; 1956년 4월 24일; 1956년 4월 30일; 1956년 7월 15일; 1956년 8월 27일; 1956년 9월 7일; 1956년 11월 1일; 1956년 12월 15일; 1957년 2월 24일; 1957년 4월

5일; 1957년 4월 21일; 1957년 4월 24일; 1957년 5월 27일; 1957년 8월 13일; 1957년 11월 21일; 1958년 1월 11일; 1958년 1월 19일; 1958년 1월 21일; 1958년 3월 4일; 1958년 3월 8일; 1958년 5월 4일; 1958년 5월 17일; 1958년 6월 6일; 1958년 6월 12일; 1958년 7월 17일; 1958년 9월 7일; 1958년 9월 9일; 1958년 9월 19일; 1958년 9월 28일; 1959년 3월 20일; 1959년 7월 16일; 1959년 12월 6일; 1960년 1월 17일; 1960년 2월 18일; 1960년 2월 26일; 1960년 2월 27일; 1960년 5월 16일; 1960년 11월 23일; 1961년 1월 20일; 1962년 10월 24일; 1964년 6월 16일; 1964년 6월 17일; 1964년 6월 24일; 1964년 9월 7일; 1981년 8월 10일; 1985년 8월 17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양문수, 『북한 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윤철기, 『북한 계획경제의 정치학』(서울: 선인, 2021).

2) 논문

김지연, “대외원조에 대한 북한의 인식 연구: 로동신문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1권 3호(국제개발협력학회, 2019).

이시연, “북한 원조의 정치경제학: 1950년대 소련·중국·동유럽 사례”(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이주호, “1950년대 북한의 철강공업 복구와 소련의 지원: 식민지 생산구조의 극복과 정을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 제65호(2024).

_____, “1950년대 소련 대북 무상원조의 지속과 변화-1956년 8월 경제원조협정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67집(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2).

조수룡, “약순환의 기원: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재정위기와 제1차 5개년계획(1957~61),” 『민족운동사연구』, 제112호(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2).

3. 국외 자료

1) 기타 자료

- 『모스크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 직원들과 소련 외무성 직원들의 면담록』,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고 장서 0102, 목록 12, 문서철 68, 문서 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의 일지와 면담기록』,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고 장서 0102, 목록 13, 문서철 72, 문서 5.

North Korea's Experience of Receiving Soviet Economic Aid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Conflict Surrounding the 1964 Pyongyang Declaration

Zhang, Chao(HeiLongJiang University)

In this article I examine North Korea's experience with Soviet economic aid in the late 1950s and the resulting conflict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its First Five-Year Plan (1957-1961), North Korea transitioned from relying on Soviet aid to self-financing its economic development. Initially dependent on Soviet assistance, North Korea gradually shifted to internal accumulation and mass movements to raise funds. The country pursued an independent economic policy, rejecting the Soviet-led 'integrated economy' approach, which North Korea believed hindered economic self-reliance. This stance led to tensions with the Soviet Union, but North Korea maintained its commitment to building a self-reliant economy. The 1964 'Pyongyang Declaration' criticized Soviet aid and advocated for self-reliance in building an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I argue that North Korea's negative

evaluation of Soviet aid experiences contributed to its development as a unique socialist state. The article highlights the divergent perspectives between aid providers and recipients, emphasizing the need for future research to consider the experiences of recipient countries. The study concludes that North Korea's transition from an aid recipient to a country offe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elevated its status and shaped its distinctive path in socialist development.

Keywords: economic aid experience, 'Pyongyang Declaration', Socialist industrialization, self-supporting economy, self-reliance